

전북 미래상용차 국제포럼 개최

4차 산업혁명시대 자율·전기차 전복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 기술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초청

전북 상용차산업의 혁신성장과 미래 산업생태계 구축 방향을 모색하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될 '2018 전북 미래상용차 국제포럼(Jeonbuk Commercial Vehicle International Forum 2018)'이 오는 1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CSCC)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와 자동차융합기술원(원장 이성수)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후원하는 국제포럼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전북의 상용차 산업이 자율·전기차 등 미래형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

해 최신 글로벌 산업동향 및 기술 트렌드 등 정보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래상용차 국제포럼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과 '미래 기술'을 주제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국과 프랑스, 말레이시아, 인도 등 5개국에서 6인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식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IT기업 히타치 반타라(Hitachi Vantara) 미국법인의 쉐인 아키텍트(Shane Archibute) 최고기술책임자는 히타치의 스마트 스페이스 및 비디오

인텔리전스를 통한 IoT로 구현되는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소개한다.

프랑스의 자율주행 선도기업인 내비아(NAVYA)의 알리 코른(Henri Coran) 최고 비즈니스 개발 책임자는 버스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다.

내비아의 국내 사업협력 및 자율주행 국산화 개발 업체 스프링클라우드의 송영기 대표는 국내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술, 차량 시뮬레이터 개발업체 이노시메이션의 변덕수 이사는 자율주행차량 검증도구로 활용 가능한 가상 시험주행 플랫폼을 소개한다.

글로벌 전기상용차 제작회사인 볼보(VOLVO) 말레이시아의 카렌 탄(Karen Tan) 부사장은 미래상용차로 인해 변

화될 도시 교통의 미래 모습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글로벌 자동차 외관디자이너 회사인 지리 디자인(GEELY Design)의 아제이 자인(Ajay Jain) 외부디자이너 수석매니저는 전기자동차 디자인의 관례로 스타일링과 지속 가능성의 균형 맞추기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은 "전라북도 자동차산업의 제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미래상용차 국제포럼을 준비했다"면서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니 많은 분들이 참석해 정보를 교류하고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업을 시작하는 자리로 발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

자치분권, 6대 전략 종합계획 '재정분권·자치경찰제' 포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사무기능 포괄적 지방 이양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임기 내 전국 확대 실시 국세-지방세 비율 8:2-7:3-6:4 개편... 지방 부담 완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정점이 됐던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종합계획안은 이날 오전 10시 계청에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28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마련됐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해당 계획안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성장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방자치권을 대폭 확대하고 주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대선 공약에서도 인 수원위원회 역할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정 과제 로 선정에 관리해온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고 말하며 자치분권체제 확립의 중요성을 피력해 왔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11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정부의 의제 수준에서 정책으로 공식화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해당 종합계획안이 확정되면 자치분권위는 소관 상임위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의 세부적인 6대 전략으로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먼저 '주민주권 구현'은 주민

의 대표가 주민자치회를 활성화 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게 해 주민 참여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에 밀집된 사무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양평가위원회(가칭)도 설치해, 지방이양에 따른 실질적인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도 포함됐다. 국가경찰은 광역범위에 적극 대응하고 별도로 자치경찰제도를 따로 도입해 현장 중심의 치안활동 수행,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먼저 시범 실시하고 분석 평가를 통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후엔 6:4로 개편해 지방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소득, 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해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에 적합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6:4로 개편하는 시점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2019년까지 현실적으로 6:4로 개편하기는 어렵다"며 "7:3을 단기 목표로 갖고 있고, 그것이 (실현)되면 6:4로 추진하는 것이 로드맵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9년까지 6:4로 개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후폭풍 부른 임종석 '공개 초청장'... 싸늘한 野

한국당, 박정희 생가 방문... '급파' 한병도 만남 불발 바른미래 도처서 불쾌감... 손학규, 동반 방북 재차 거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공개 초청장'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야당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초청 발표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11일 사대 수습차 뒤늦게 여의도에 급파됐지만 반응은 싸늘하다.

한 수석은 이날 여야 대표들을 예방하려 국회를 찾았다. 그러나 사전 예고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자유한국당과는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경북 구미 박 전 대통령 생가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순서가 조금 바뀌었으면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뻔 했다. 먼저 (야당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셨으면..."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가 야당과 협의 후 초청 발표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역지로 국회를 각 정당을 좀 걸기라도 (정상회담에) 참여했을 모습이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5일 앞두고 초청을 했다는 건 서로 결례인 것"이라고 거듭 불쾌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 반응도 싸늘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국회에서 한 수석을 맞

은 손 대표는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수석에게) 뭘하러 왔냐고 했다"며 "제가 (정상회담에) 안 간다고 했는데 왜 왔냐고 했다"고 설명

했다. 또 한 수석 예방 직접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임 실장 공개 초청장에 대해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

손 수석은 한 수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여야의 대거 화합, 협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건 국내정치용인데 (정상회담을) 국내정치용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손 대표에게 정상회담 동반 방북을 재차 제의했지만 손 대표는 거절했다. 아울러 당초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기본적 친선' 방침을

밝혔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 의중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의당에서도 임 실장 공개 초청장에 대한 비판은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정단체 정당 대표의 동행 방문이 초유의 일인 만큼 사인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제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했다"고 지적

했다. 야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문화상 국회의장이 포함된 국회의장단에서도 동반 방북을 거절한 상황이다. 한 수석은 일단 여야 대표들을 최대한 만나 방북 취지를 설명하고 국회의장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지만 결국 야당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뉴시스

이목희 "연내 일자리 50만개 창출... 4분기 고용 다소 개선"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4분기 이후 고용상황 개선을 전망하며 연내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제8차, 7차 회의에서 마련되는 일자리 수는 20여만 개이고, (연내) 8차, 9차 회의에 선 30여만 개가 마련돼 총 50여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용상황은 엄중하지만 올내 4분기 이후 고용 사정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1분기가 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일정 정도 현실화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고용상황에 대

해 "고용지표는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가 적지 않다"며 "전체 근로자 중 임금 근로자 수는 7월 사상 최대로 높아졌고,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용 있는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은 신규 취업자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은 철저히 고용 친화적으로 집행돼야 한다. 하강국면 산업에 대한 적절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 "재계와 정부가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식

전북도와 (사)전북옥외광고협회는 아름답고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11일 전북도청 1층에서 1000여명의 옥외광고 관계자 및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북도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식'을 열었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